

統一情勢分析 2001-05

# 한·러 정상회담 결과분석

2001. 3

여인곤(국제관계연구실 연구위원)

통일연구원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 목 차 -

I. 문제제기 .....	4
II. 정상회담 개최배경 .....	6
1. 회담이전 양국관계 .....	6
2. 양국의 회담 목적 .....	7
III. 정상회담의 주요 내용과 평가 .....	10
1. ‘건설적이고 상호보완적인 동반자관계’의 심화 .....	10
2. 대북 포용정책의 지속적 지지 확보 .....	11
3. 국제안보 문제에 대한 인식 공유 .....	14
4. 양자간 및 남북한-러시아 3각 경협을 증진 .....	16
IV. 향후 대러정책 방향 .....	19
1. 양자 관련사안 .....	19
2. 대북 관련사안 .....	21

## I. 문제제기

- 엘친 대통령의 전격적인 사임(1999. 12)으로 조기 대선을 통해 러시아연방 제3대 대통령에 취임(2000. 5)한 푸틴은 ‘강한 러시아’를 표방하면서 의욕적인 대내외정책을 수행하고 있음.
  - 러시아 정치는 소련 붕괴 이후 가장 안정된 상태에 있고, 경제는 아직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1999년 이후 회복 추세에 있음.
  - 대외적으로 푸틴 대통령은 엘친 전 대통령의 집권 2기(1996. 8)부터 추진된 전방위 외교노선을 계승하고 있음.
  
- 러시아는 한·소 수교(1990. 9) 이후 남한 중심의 한반도정책을 추진하였으나 김일성 사망(1994. 7)을 계기로 균형된 남북한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 이러한 정책변화에는 러시아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한국의 소규모 투자와 경협차관 제공 중단(1993. 8), 북한 핵문제 해결과정에서의 소외 등이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판단됨.
  
- 남북정상회담 직후 북한을 방문(2000. 7)하여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회담한 바 있는 푸틴 대통령은 금번 한국을 방문(2001. 2. 26~28)하여 김대중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개최하였음.
  - 러·북관계는 북·소 군사동맹조약(1961년 체결)을 대체하는 「조·러 친선선린 및 협조조약」의 체결(2000. 2)과 푸틴 대통령의 방북시 「조·러 공동선언」의 채택으로 재정립되었음.

○본 보고서는 한·러 정상회담의 개최 배경과 그 결과를 고찰·분석  
하고 우리 정부의 향후 대러정책 방향을 제시하려는 데 목적이  
있음.

## II. 정상회담 개최배경

### 1. 회담이전 양국관계

- 한·소 수교이후 양국관계는 ‘선린·신뢰·협력의 관계’(「한·소관계의 일반원칙에 관한 선언」, 1990. 12) -> ‘우호협력관계’(「한·러 기본관계조약」, 1992. 11) -> ‘건설적이고 상호보완적인 동반자 관계’(「한·러 공동선언」, 1994. 6)로 특징지워져 왔음.
- 1990년대 후반기 한·러간 인적, 물적 교류는 확대되었으나 정보의 교관 맞추방 사건(1998. 8)이 발생함으로써 양국은 수교이후 최대의 외교위기를 맞았음.
  - 4자회담에서 러시아의 소외, 최덕근 블라디보스톡 주재영사 피살사건(1996. 10) 해결에 대한 러시아 정부의 미온적 태도 등으로 양측의 불만이 누적된 상태에 있었음.
- 김대중 대통령과 엘친 전 대통령 간의 모스크바 정상회담(1999. 5)을 통해 양국은 외교위기를 극복하고 ‘건설적이고 상호보완적인 동반자관계’를 재확인하였음.
  - 이후 한·러간에 큰 정치적 사안은 발생하지 않았음.

- 푸틴 대통령은 집권이후 러시아의 강대국 지위 유지와 경제난 해결을 위한 유리한 국제여건 조성을 목표로 전방위 외교노선을 취하고 있음.
  - 특히 서방과의 대결을 가급적 회피하면서 경제실익을 도모하기 위한 실용주의적, 현실주의적 외교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푸틴 대통령이 승인한 「러시아연방 대외정책 개념」(2000. 6)에 의하면, 러시아는 한반도 상황을 아시아지역에서 가장 큰 관심사안으로 지적하고 있음.
  - 또한 ① 한반도문제에 대해 동등한 참여를 확보하고, ② 남북한과 균형된 관계를 유지하고자 노력할 것임을 밝히고 있음.

## 2. 양국의 회담 목적

- 상기과 같은 러시아의 외교목표와 한반도에 대한 이해 등을 고려할 때, 푸틴 대통령은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서울을 공식방문한 것으로 분석됨.
  - 첫째, 부시 미국 공화당 정부의 출범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중국방문(2001. 1), 한·미 정상회담(2001. 3)과 제2차 남북정상회담의 개최 예정 등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한반도에 대한 발언권과 영향력을 강화하고자 함.
  - 둘째, 한·러간 경협 확대와 방산물자 판매, 남북한간 긴장완화 분위기 속에서 남북한과 러시아간 3각경협의 실행 등을 통해 경제실익을 확보하려 함.

- 셋째, 미국의 세계정책을 견제하기 위해 국가미사일방어(NMD) 계획, 「탄도탄요격미사일 제한조약」(ABM 조약), 「전략무기감축협정 II」(START II),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CTBT) 등 미국과 상이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국제안보·군사 문제에서 한국 정부의 지지를 얻고자 함.
- 한편, 푸틴 대통령의 취임 직후 방한을 요청한 바 있는 김대중 대통령은 한·러 정상회담과 관련, 다음과 같은 정책목표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됨.
- 첫째, 대북 포용정책에 대한 푸틴 대통령의 지지를 확보하는 한편,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 답방 분위기를 조성함.
  - 둘째, 한반도에서의 정전체제를 긴장완화 및 평화 체제로 전환하는데 있어서 러시아 정부의 건설적 역할을 요청함.
  - 셋째, 한·러 양국간 경협을 실질적으로 증진하고 남북경협 발전을 위한 러시아의 긍정적인 기여를 기대함.
- 상기와 같은 한·러 양국의 이해일치로 푸틴 대통령은 엘친 전 대통령의 방한(1992. 11) 이후 러시아연방 대통령으로는 두 번째로, 8년만에 방한하였음.
- 클레바노프 러시아 방위산업 담당 부총리, 이바노프 외무장관 및 차관급 14명, 경제인 30명, 수행원과 기자단 등 총 150여명이 방한 하였음.

- 정상회담을 앞두고 제4차 「한·러 무역공동위원회」(2001. 2. 24)와 제3차 「한·러 경제·과학·기술협력 공동위원회」(2. 26)가 각각 개최되었음.
- 「한·러 무역공동위원회」에서는 양국간 교역과 투자 및 민간협력 부문 현안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실질 협력을 보다 구체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였음.
  - 「한·러 경제·과학·기술협력 공동위원회」에서는 러시아 극동 및 시베리아 지역과의 협력 강화를 위한 실무협의 기구로서 「한·러 극동 및 시베리아 분과위원회」와 남북한 철도의 시베리아 횡단철도 연결을 위한 「한·러 교통협력위원회」를 설립하기로 합의하였음.
  - 또한 군수품 및 민수품 분야에서의 협력각서가 체결되었는 바, 한국 정부는 총 7억달러 상당의 군사용 수송기·훈련기·연료공급기·헬기·공기부양정 및 알루미늄과 원자재 등을 구매하고 이중 ½은 현금으로 지불하며 나머지 ½은 러시아의 경협차관 미상환액(18억달러)에서 상계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III. 정상회담의 주요 내용과 평가

○ 김대중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은 단독 및 확대 정상회담(2. 27)을 개최하고 7개항으로 된 「한·러 공동성명」을 발표하였고, 푸틴 대통령은 국회연설(2. 28)을 하였던 바,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이 분석·평가될 수 있음.

#### 1. ‘건설적이고 상호보완적인 동반자관계’의 심화

○ 김대중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은 「한·러 공동성명」 제1항에서 양국 간의 ‘건설적이고 상호보완적인 동반자관계’의 지속적인 발전이 양국 국민들의 이해와 동북아에서의 안보 및 안정 강화에 중요하다는 데 합의하였음.

○ 금번 정상회담을 통해 정치, 안보·군사, 경제, 과학기술, 문화 및 예술 등 제반 분야에서 양국간 실질협력을 증진·심화시킬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음.

- 「한·러 공동성명」 제2항에서 “양측은 양국 정상, 총리, 각료, 의회 지도자들을 포함한 다양한 수준에서의 대화와 협의를 증진해 나가는 한편, 상호 관심있는 양자 문제와 국제문제에 대해 정기적으로 의견을 교환해 나가기로 합의”하였음.

- 제4항에서 양국간 “외교관계의 수립 1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2000년중 개최된 다양한 행사가 양국 국민들간의 상호 이해와 신뢰 증진에 크게 기여해 오고 있음을 만족스럽게 평가”하고, “양측은 문화, 예술, 과학, 교육, 법률 등 분야에서의 양국간 교류와 협력을 더욱 증진시켜 나가기로 합의”하였음.
- 제6항에서 양측은 아·태지역에서의 평화와 번영 및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아·태경제협력체」(APEC)를 통한 양자 및 다자 차원에서 협력 강화와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의 적극 협력에 합의하였음.
- 푸틴 대통령은 국회연설에서 “러·한 관계는 성숙한 동반자관계로 냉전관계를 벗어나 호혜적 협력의 길로 접어들었다”고 밝혔으며, 정재문 한나라당 의원, 이정빈 외교통상부 장관,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 등 한·소수교 및 한·러 친선관계에 기여한 7명에게 친선우호 훈장을 수여하였음.

## 2. 대북 포용정책의 지속적 지지 확보

- 푸틴 대통령은 제1차 남북정상회담과 그 이후의 남북관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남북대화의 진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하였음.

- 양국 정상은 「한·러 공동성명」 제7항에서 “남북정상회담과 후속 조치가 한반도에서의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은 물론 남북한간의 화해와 협력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였음을 재확인”하였음.
  - 푸틴 대통령은 국회연설에서 제1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비롯된 한반도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음.
- 우리 정부는 현재 조성되고 있는 남북한 화해·협력을 한반도 긴장 완화 및 평화정착으로 발전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는 바, 러시아측은 이에 계속 기여하고자 하는 용의와 의지를 표명하였음.
- 한국측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러시아의 건설적 역할과 기여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
  - 그러나 러시아측은 한반도에 긴장완화와 평화가 정착될 경우 미국이 계획하고 있는 NMD 체제 구축의 주요한 명분의 하나를 제거할 수 있다는 실용주의적 목적도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한·러 공동성명」 제7항에서 양국 정상은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 미사일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희망하였음.
- “양측은 한반도에서의 핵 위협을 제거하기 위하여 1992년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과 1994년 제네바 합의가 충실히 이행되어 나가야 한다는 데 동의”하였음.
  - 또한 북한의 미사일 개발, 수출 및 배치에 관한 문제가 관련국들간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조속히 해결될 수 있기를 희망하였음.

- 이는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이 북한 미사일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압력이나 제재를 가하는데 러시아 정부가 반대한다는 것을 의미함.

○1990년대 전반기 북한 핵문제 해결 과정에서 소외되었던 러시아는 현재 북한 핵 및 미사일 문제의 해결 과정에 참여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음.

- 푸틴 대통령은 국회연설에서 “대량파괴무기의 철폐와 비핵국가 지위보장 없이는 한반도의 긴장완화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하고 “러시아는 (한반도의) 이러한 과정에 일익을 담당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음.

○푸틴 대통령은 남북간 평화과정의 남북한 당사자 원칙, 모든 문제의 평화적·외교적 해결, 국제법적 보장을 통한 안전보장과 평화통일을 지지하였음.

- 이는 남북평화협정이 체결되는 경우, 러시아 정부가 국제적 보장국의 일원으로 참여하겠다는 의도를 나타낸 것임.

○또한 양국 정상은 동북아 지역의 전반적인 안보환경과 협력문제를 다루는 다자대화의 실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하였음.

- 한·러 양국은 동북아 역내국가들 중 다자안보대화의 형성에 가장 적극성을 보이고 있음.

### 3. 국제안보 문제에 대한 인식 공유

- 「한·러 공동성명」 제5항에서 양국은 국제 테러리즘에 대항하기 위한 국제협력의 강화, 대량파괴무기와 그 운반수단의 확산 방지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였음.
  - 양국은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의 활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러시아가 제안하고 있는 미사일과 미사일 기술의 비확산에 대한 국제감시체제(GCS) 구상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음.
  - 또한 양국은 2000년 「핵비확산조약」(NPT) 평가회의에서 채택된 최종문서의 완전한 이행, CTBT의 조기발효,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조치 체제의 효율성과 효과성 증진 등이 중요함을 강조하였음.
- 양국은 1972년 체결된 ABM 조약이 전략적 안정의 초석이라는 데 동의하는 한편, ABM 조약의 보존·강화, START II의 조기발효와 완전한 이행, START III의 조속한 체결을 희망하였음.
  - 미국은 NMD 체제 구축을 위해 러시아에 ABM 조약의 수정을 요구하고 있고 START II와 CTBT를 아직까지 비준하지 않고 있음.

- 이는 CTBT가 핵실험을 완전히 방지할 수 없으며 미국이 보유한 핵무기 노후화를 막기 위해 핵실험이 필요하다는 입장 때문임.
  - 한국 정부는 러시아의 CTBT 비준(2000. 4. 21) 및 START II 비준(2000. 4. 15)을 환영하였음.
- 「한·러 공동성명」에 ‘ABM 조약을 보존하고 강화’란 문구가 포함된 것과 관련, 국내외적으로 논란이 야기되었음.
- 국내외 언론들은 공동성명이 간접적으로 미국이 추진 중인 NMD 체제를 비판 또는 반대하고 있다거나 한국 정부가 NMD에 반대하는 러시아 편을 들고 있다고 보도하였음.
  - 한국의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그러한 표현은 오키나와 G-8(2000. 7)을 포함하여 여러 국제선언에서 반복되었고,” “언론 보도들은 오도하고 있고 정부 입장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며,” “한국은 NMD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는 성명을 발표(3. 1)하였음.
- 우리 정부가 「한·러 공동성명」에 그 문구를 포함시킨 것은 국제정치 역학관계보다는 한반도의 새로운 위기 가능성을 감안했기 때문이라고 판단됨.
- NMD가 새로운 군비경쟁을 유발하여 북한으로 하여금 미사일 개발을 포기하도록 하려는 시도를 무산시킬 수 있다는 우려와 남북관계 개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을 것임.

- 러시아측은 처음에 NMD 반대를 의미하는 문구를 포함시키도록 매우 강력히 요구하였으나 우리 정부는 완강히 반대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1972년 ABM 조약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는 러시아와 한국의 공동성명이 미국 NMD 체제에 대한 한국의 반대를 나타내지 않는다. 공동성명에는 미사일 방어에 대한 언급이 없다”고 밝혔음(3. 1).
- 김대중 대통령은 부시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3. 8)에서 미사일 위협이 ‘억지와 방어에 새로운 접근’을 요구하며 방어체제 등 광범위한 전략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한다는 공동발표문을 내놓았음.
- 이는 한국이 NMD와 관련하여 러시아측으로 경사할 지 모른다는 미국의 우려를 완화시켰음.

#### 4. 양자간 및 남북한·러시아 3각 경협외 증진

- 「한·러 공동성명」 제3항에서 “양측은 무역과 투자, 에너지와 자원, 산업, 중소기업, 과학기술, 정보기술과 통신, 어업, 해운, 항공, 철도, 환경, 관광 및 지역협력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하였음.

○ 특히 양국 정상은 제3차 「한·러 경제·과학·기술협력 공동위원회」의 성공적인 개최결과에 대해 만족을 표명하였으며 동 공동위에서의 결정을 조속히 실현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 나가기로 합의하였음.

- 「한·러 극동시베리아 분과위원회」가 한국과 러시아 극동·시베리아 지역간의 무역, 투자 및 기타 경제분야에서의 협력을 실질적으로 증진시켜 나가게 되기를 희망하였음.

○ 양국 정상은 나훗카 자유경제지역내 한·러 산업공단 건설사업의 조속하고 성공적인 이행, 이르쿠츠크(코비크타) 가스전과 사할린 석유·가스 개발사업에 관한 긴밀한 협력 등에 합의하였음.

- 이한동 국무총리는 방러(2000. 10)시 카시아노프 총리와의 회담을 통해 총 100만평 중 2001년부터 6만여평 규모의 나훗카 공단 1차 조성사업에 착수하기로 하였음.

- 이르쿠츠크 가스전 프로젝트는 파이프라인(러시아 - 몽골 - 중국 - 한국)을 포함한 비용이 약 110억달러로 추산되며, 한국은 매년 약 100억<sup>m</sup>의 가스를 구매할 수 있음.

- 사할린은 액화가스 플랜트와 파이프라인 건설을 2002년 착수할 준비가 되어 있고, 한국에 대한 가스공급을 2005~2006년 시작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

- 또한 양국은 어업분야와 항공, 우주, 신소재, 기계공학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의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음.
- 양국 정상은 남북한 관계의 긍정적인 진전이 남북한과 러시아간 3각경협에 대한 호의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에너지와 자원 및 한반도 종단철도와 시베리아 횡단철도의 연결사업을 이행하는데 노력하기로 하였음.
  - 「한·러 교통협력위원회」 설치에 대한 합의를 환영하였음.
  - 푸틴 대통령은 한국의 주요 경제인들과의 오찬(2001. 2. 27)에서 철도연결에 수 억 달러를 투자할 준비가 되어 있고, 러·북 정상 회담시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관심을 보였다고 밝혔음.
  - 이로써 남북한간에 추진중인 경의선 철도 연결과 함께 경원선 연결의 가능성이 열렸음.
- 우리 정부는 러시아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과 세계 경제체제로의 본격적인 편입을 지지하였음.

## IV. 향후 대러정책 방향

### 1. 양자 관련사안

- 현재 한·러 양국간에는 심각한 정치적 현안이 없으며 러시아 정부도 양국의 정치관계 수준이 매우 높다고 평가하고 있으나, 우리 정부는 각 분야별 인적 교류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할 것임.
  - 모든 수준에서 적극적인 정치적 대화가 상호관계 발전뿐만 아니라 갈등 노정의 경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임.
  
- NMD 문제와 관련, 우리 정부는 이 문제가 미·러 양국의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취할 필요가 있음.
  - 부시 미대통령은 NMD 계획의 추진을 역설하면서도 러시아와 문제 협의를 위한 실무그룹 조직에 합의(2. 24)하고 러시아에 미사일 방어기술의 공동개발을 제안하고 있음.
  - 미·러 양국은 국제질서의 냉전으로의 복귀를 원치 않을 것이기 때문에 타협할 가능성도 있음.
  
- 동북아 다자안보대화 형성과 러시아가 구상하고 있는 GCS에 대한 학술차원의 공동연구를 모색함.

○ 러시아측은 한국과 정치적 접촉의 수준이 매우 높은 데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향후 대러관계에서 경제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음.

- 러시아는 경제면에서 아직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경제상황이 호전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한·러 경협관계도 점진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 러시아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1998년 -4.9%, 1999년 3.2%, 2000년 6.3%이었고, 2001년 4.0%, 2002년 4.0%로 예측되고 있음.

○ 향후 한·러 경협관계를 더욱 확대·발전시키기 위해서 우리 정부는 기존의 경협약속 중 실현 가능한 것부터 성의있게 이행함으로써 상호간 신뢰를 공고히 해야 할 것임.

○ 나훗카 한·러 산업공단 건설 관련 협정에 러시아 연방하원인 국가두마가 아직까지 비준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국가두마가 조속히 비준절차를 거치도록 러시아 정부에 촉구해야 할 것임.

- 또한 러시아 정부에 공단 주변의 사회간접자본 시설들을 가능한 한 신속히 정비·조성 해주도록 요청할 필요가 있음.

## 2. 대북 관련사안

- 우리 정부는 러시아의 대북정책을 지지하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모스크바 방문시 제2차 남북정상회담이 순조롭게 성사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줄 것을 러시아 정부에 요청해야 할 것임.
  - 푸틴 대통령은 한국 주요 경제인들과의 오찬(2. 27)에서 “우리는 공동이익을 위해 현재 높은 수준의 러·북간 국가관계를 이용할 것이나 어떠한 간섭이나 압력을 배제한다”고 밝힌 바 있음.
  
-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모스크바 방문시 북한 미사일의 개발과 증강 배치가 한반도 긴장조성의 요인이며, 특히 대포동 2호는 미국에게 NMD 계획의 구실을 주고 있음을 러시아가 북한측에 주지시키도록 요망함.
  -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 유보선언(1999. 9)에도 불구하고 최근 노동 1호의 증강 배치, 대포동 1·2호용 지하미사일 기지 증설, 대포동 2호의 엔진시험 계속, 장거리포의 추가적인 전방배치 등이 알려지고 있음.
  
- 한·러 양국은 대량살상무기와 그 운반 수단의 확산을 공동으로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 정부에 북한 핵과 미사일 관련 정보의 공유 및 관련 전문가와 기술의 불법 유출 방지를 요청해야 할 것임.

-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가 이란과 북한 등에 대량과괴무기 관련 기술 및 부품을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있다는 미국의 비난을 부인(2. 23)하면서도 이들 물자와 관련한 자국의 수출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시인하고 있음.
-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정보기관이 기술의 유출을 철저히 추적하고 예방하라고 촉구하였음.

○ 러시아는 1994년부터 17개 사업에 대한 남북한·러시아간 3각경협을 제안하여 왔는 바, 그 실현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3국 공동의 실무기구(가칭: 남북한·러시아 경협 자문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고려함.

- 러시아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모스크바 방문 이후 구소련에 의해 북한에 건설된 70여개 공장의 재가동 및 북한의 에너지 분야에 대한 3각경협을 강력히 주장할 것으로 예측됨.